

# 역사적인 남북 첫 '365일' 소통시작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오는 14일 개소  
 “서울-평양 상시 고위급 채널 가동 목표”  
 남북 차관급 인사 소장 임명...확대 발판  
 소통 수요 있을 경우 상호 대표부 검토

역사적인 첫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향후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라며 “서울-평양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 가동을 목표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날 8·15 경축사에서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성공단 내에 설치되는 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상주하면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당국간 협의·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연락 수요가 늘어날 시 언제든지 상호 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 대표부는 대사관 설치 등으로 가기 이전 단계의 창구역할을 하는 ‘대사급’ 기구로 현재 남북이 추진 중인 공동연락사무소보다는 외교상 격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락사무소가 상호 대표부로 발전할 경우 조직이나 업무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남북이 이번엔 연락사무소장을 ‘차관급’ 인사로 합의한 것은 향후 ‘대사급’ 상호 대표부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소

장에 차관급 인사로 임명하면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을 키우고 동시에, 남북 정상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비공식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근거, 소장을 ‘상시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하고 차관급 인사가 맡도록 했다. 북측은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해 온 상태다.

아울러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양측이 협의를 통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단서를 붙여, 향후 남북간 소통 수요가 늘어날 경우 언제든지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일부에 2명, 현재와 같은 점이지 아닌 개성공단

## 고용동향 8월 취업자 3000명 ↑ 그쳐 靑 “경제 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정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의 고용 소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대해 “오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접견에서 “우리 정부가 가능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그동안 해오던 말씀과 역할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밤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이 발간한 저서 ‘공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주한미군 소개령을 트위터에 올린 후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회용컵 없는 국회 환노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자양하지는 의미의 물컵이 놓여 있다.

## 한국·바른미래, 청문회·대정부질문 연기 요구

### “‘정상회담 이벤트’에 국내 현안 가려질 수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는 18~20일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 회담을 앞두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상회담 이벤트’에 국내 현안이 가려질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에 협조하지는 미지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족사적 대의(정상회담)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으로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반대로) 민족사적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19일로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당 대표단을 평양에 동행하지는 정권이 평양 정상회담에 매몰돼 정기국회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청문회 일정 등을 추후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현법상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대행

의사일정 연기를 주장한 이면이다. 민주당은 기존 의사일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와 교육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국당에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반대로 19일 인사청문회가 집중 편성됐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에 “한국당이 앞서” 정상회담과 상관 없이 19일에 모두 하자고 해서 우리가 밀리고 일정을 (19일로) 잡게 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요구로 합의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에) 대정부질문 전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럼 정상회담이 있으니 대정부질문 중에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상회담에 (신입) 국방부 장관이 갈 수 있도록 17일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며 19일을 한국당이 고집했다”고도 전했다.

뉴시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